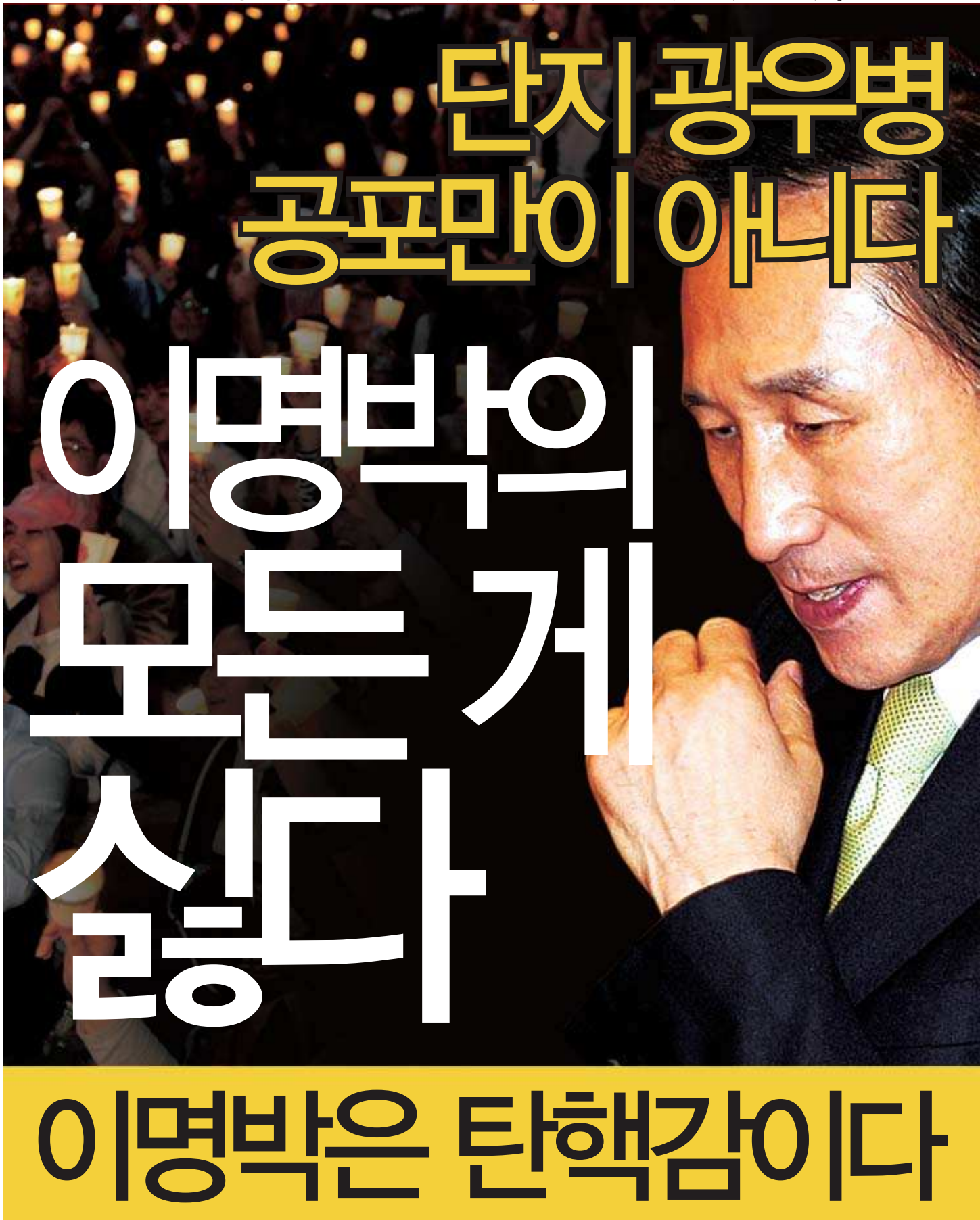




우석균 칼럼
- 누가 과담을
퍼뜨리는가?

4면

미친 소 운송 거부를 선언한
운수노조 김종인 위원장 인터뷰
12면



특집: 2MB의 미친 정책들

- 재벌천국을 위한 한미FTA
- 사교육 천국과 입시지옥화
- 의료 민영화가 낳을 재앙
- 재앙이 넘실거리는 대운하
- 공기업 사유화의 꿈직한 미래

5, 6~8면

이명박이 키운
조류 인플루엔자

2면

이주노동조합 지도부
강제 연행

12면

갈림길에 선 볼리비아

9면

간통죄 폐지 논란

2면

www.counterfire.or.kr

<맛불>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맛불> 온라인 기사

전교조 전국 지회장 결의대회 소식

5월 3일 공무원 노동자 집회 보고

화물연대 투쟁 소식

.....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미친 소 전면 개방이 부글부글 끓던 반이명박 정서에 불을 붙이면서 나타난 거대한 촛불의 바다가 이명박 정부와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5월 2~3일 동안 무려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다. 5월 6일에는 합쳐서 2만여 명이 청계광장과 여의도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부산, 춘천, 수원 등 지역으로도 촛불이 번져가고 있다. 우파 정부는 불과 두 달 만에 '탄핵' 요구에 직면했다. 한 고등학생이 발의한 이명박 탄핵 서명은 1백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지지율이 20퍼센트 대로 추락한 이명박은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했고, 우파들은 분열해서 허둥지둥대고 있다.

부글부글

기겁을 한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은 지금 온갖 역겨운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소년 놀이문화가 부족하니까... 촛불 집회 가면 재미있지 않느냐"고 했다. <조선일보>는 "어느 텔런트의 미친 발언"에 "판단력 없는 중·고교 학생들"이 휩쓸렸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청소년과 청년·학생들은 누구에게 떠밀리기는커녕, 스스로의 힘으로 이 사회와 나머지 사람들을 떠밀고 있다. 이들에게 떠밀려서 유명 가수나 텔런트들이 소신있는 발언을 한 것이고 1천5백여 시민·사회단체들도 나서게 된 것이다. 심지어 친미우파인 이회창과 박근혜마저 조중동을 비판하고 '재협상'을 얘기할 정도다. 5월 6일 청계광장에서 한 고교생은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우리가 바로 4·19와 5·18의 주역이었다"고 말했다.

청소년과 청년·학생들은 우

파와 보수 언론에 대한 불신·혐오를 거침없이 드러내고 있다. 얼마 전까지 일부 언론과 지식인들이 말한 '젊은 층의 보수화'는 황당한 얘기가 됐다.

거리로 나선 청소년(여성이 다수)들은 놀랄 만큼 기발한 구호와 주장, 창조적 아이디어로 이 운동을 찬란하게 빛내고 있다. 청계광장 자유발언에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억누르는 정부와 제도를 조롱하고, 날카롭게 비판하며 뿌리채 뒤흔들고 있다.

» 3면으로 이어짐



인용해도
될까요?

“재수없게 마친 소 걸려서 나 병신
되면 어찌지 … 입은 웃고 있어도
눈물이 흐르는 이유는 뭔가. … 언
젠가부터 뉴스란 게, 내게 3초의 웃
음 뒤 30분의 고요함을 주고 있어.”
– 슈퍼주니어 김희철

“[이명박 2달 만에] 벌써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4년 10개월이나 남았습니
다. 심기일전하시기 바랍니다.”
– 〈샤투나잇〉방송중
한창록 PD의 멘트

“청계천에 모인 1만 명 중 과연 몇
명이 죽은 쇠고기도 먹지 못하는 …
북한 동포들의 배고픔과 건강을 생
각해 보았을까?”
– 우익인사 조갑제

“저는 그 친구 형편없는 짓했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설거지 했다
고 하는 것은 양심이 없는 것 아닙니
까? 노무현이가 합의를 다 해놓고 도
장만 안 찍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
겠으나 노무현이는 도장을 안 찍었
고, 이대통령은 찍었습니다.”
– 반이명박 반사이익에 신난 노무현

“그런데 요즘 나쁜 어른들이 있어서
할아버지가 걱정이 많아요. 대통령
할아버지가 나쁜 어른들로부터 여
러분들을 책임지고 지켜줄 거예요.”
– 어린이날 이명박의 망언

“일단 자리에 기본이 3만 원이고,
아까씨 봉사료는 한 명당 6만 원이
예요. 이쁜 애들로 넣어드릴게. …
[2차(성매매)는] 오빠가 애들한테 잘
말해 보셔.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이
죠.”
– 이명박 소유의 서울 양재동 영일
빌딩 ‘스노래빠’ 마담

무섭게 확산되는 조류 인플루엔자

이명박 정부가 재앙을 키우고 있다

박건희(수의사)

불과 한 달 만에 조류 인플루
엔자가 전국으로 확산됐다. 전북
김제에서 처음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이제 전남,
경기, 충남을 찍고 경북, 강원도
로 확산되더니 결국 서울에 도착
했다. 어린이대공원과 서울대공
원 일부가 폐쇄됐다.

이번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처
음 발생한 경로가 무엇이든 급속
한 확산의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다. 정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
생 초기 “날씨가 따뜻해졌기 때
문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며 반경 3킬로미
터 살처분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경북 영천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가 발생한 사실을 3일 동안 숨겼
고, 영천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
생이 확인된 뒤 하루가 지나도록
일부 지역 도로에서는 차량 통제
조소가 설치되지도 않았다.

정부의 보상도 형편없는 수준이
다. 3년 전에 정한 보상 금액을 농
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그 사
이 사료 값은 60퍼센트나 올랐다.
형편없는 보상 때문에 일부 농민
들은 살처분 전에 병든 닭과 오리
를 빼돌려 팔았고 이것이 조류 인
플루엔자의 확산을 촉진시켰다.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현재

까지 조류 인플루엔자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조류 인
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
키고 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주
고 있다. 동남아시아처럼 조류 인
플루엔자가 1년 내내 발생할 가능
성도 제기되고 있고, 사람에게로
의 전염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이
미 살처분 작업에 참가했던 현역
군인이 고열과 기침으로 입원했
고, 몸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
러스 항체 양성 반응이 나왔다. 정
부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아니었다
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많은
사람들은 대재앙으로 한 발 더 다
가간 듯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조지 부시와 시

시덕거리며 아프가니스탄 경찰
파견, 광우병 쇠고기 수입, 한미
FTA 비준 등에 정신이 팔려 있
던 지난 한 달여 동안 무시무시
한 바이러스는 그 힘을 더 키워
수천만 명이 밀집해 살고 있는
수도권에 진입했다.

수도권

각종 연구들은 조류 인플루엔
자의 ‘인체 간 전염’ 가능성을 기
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
고 세계보건기구는 이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이 사
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부 학
자들은 이 수치도 희망사항에 불

과하다며 실제 H5N1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사
망률을 대입하면 10억 명 이상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1918년 전 세계에서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력한 인플루엔
자가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끔찍한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
체 감염 초기에 사용할 치료제
(타미플루)를 인구 대비 3퍼센트
도 안 되는 분량만 확보해 놓고
있다. 지금 당장 타미플루 생산
에 나서야 한다. 제약회사의 돈
벌이를 보호하는 특허권을 무력
화하는 ‘강제실시권’을 발동해서
라도 말이다.

폐쇄된 어린이대공원 – 조류 인플루엔자는 서울까지 북상했다

탈레반의 경고

5월 2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대변인이 “한국이 경찰이나 군대
를 보내면 외교관이나 민간인을 비
롯해서 카불에 있는 모든 한국 관

련 건물과 단체를 공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인들이 3명이나 죽었다. 2월에는
윤창호 병장이 사망했고, 7월에는
한국인 선교단 23명이 탈레반에 피
랍돼 안타깝게도 배형규 · 심성민

씨가 피살됐다. 당시 한국인이 아프
가니스탄 저항 세력의 표적이 된 것
은 바로 한국군 파병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명박은 아프가니스탄
에 한국 경찰 파견을 약속했다. 아
프가니스탄 경찰을 훈련시키는 것
은 명백한 점령 지원 정책이다.

이명박과 부시는 한국 국민의 안
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명
박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분노하
는 이들은 같은 이유에서 이명박의
아프가니스탄 “경찰” 파견에도 반
대할 필요가 있다.

김광일

간통죄 위헌 논란 간통죄가 폐지돼야 하는 이유

최미진 (2008년 3월 조사)

5월 8일, 간통죄가 1990년 이
후 네 번째로 헌법재판소(헌재)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2001년
헌재가 합헌판결을 한 이후로도
텔런트 욕소리 씨 등의 위헌심판
제청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던 한국여성단체연합(여
연)이 최근 입장을 바꿔 여성민
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간통죄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
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여성 단체
들은 간통죄 존치를 주장하고,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의
비율이 69.5퍼센트나 된다.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는 여성
단체들은 간통죄가 여성을 보호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간통죄가 지키고자 하
는 것은 여성의 존엄성이 아니라
바로 가족제도다. 그리고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대체로 여
성들의 희생을 강조하는 것과 연
결돼 왔다. ‘가족 강화’는 여성들
이 집안에서의 역할을 더 많이
해야 하고, 아이의 양육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하고, 불행한
결혼 생활일지라도 참아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해 왔다. ‘여성이 있
어야 할 곳은 가정’이라는 관념
때문에 여성들은 남성의 60퍼센
트밖에 안되는 임금도 감수하라
고 강요받는다.

정부와 우익들이 간통죄를 유
지하고, 이혼을 어렵게 하는 등
가족제도를 강화하려는 이유는
이처럼 가사와 육아에 대한 책임
을 개별 가정의 여성들에게 떠넘
기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유에서다.
간통으로 더 많은 비난을 받는
것도 여성이다. 욕소리 씨 관련
기사에 달린 거친 댓글들만 봐도
간통죄가 얼마나 여성들에게 편
견에 가득찬 시선을 안겨주는지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간통죄는 이른바
‘불륜’을 저지른 개인들을 비난
해 보수적인 이데올로기를 강화
하고,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국
가권력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
각을 심어 준다.

간통죄가 ‘가정 파탄’을 막는
효과도 거의 없다. 간통죄 기소
는 이혼을 전제로 성립하기 때문
에 간통죄는 가정파탄을 막기 보
다는 이미 파탄난 관계에서 복수
심을 충족시켜 주는 수단이 될
뿐이다.
여성들은 간통으로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
는 대부분 이혼 시 위자료나 재
산분할에서 더 유리한 지위를 점
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통 고소를
한다. 따라서 여성들은 경제적인
보장만 받으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최근 20년간 간통죄 기소율은
급격히 떨어져 2006년에는
13퍼센트밖에 안됐다.
게다가 간통죄는 “성관계를

통한 사정 장면”을 목격해야만
신고가 성립되기 때문에 ‘현장’
을 ‘덮치기’ 위해 배우자의 일상
을 감시하면서 못지 못할 일들도
벌어진다.
무엇보다 개인의 애정관계와
성생활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성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범죄자로 만들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여성과 남
성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
다 줄 리가 없다.
여성들이 이혼 후에도 안정적
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
면, 간통죄를 존치할 게 아니라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훨
씬 더 나은 해결책이다.
여성들의 경제적 독립을 위
해, 여성이 남성의 3분의 2밖에
안 되는 임금을 받고 비정규직
으로 내몰리는 현실부터 바뀌야
한다.

미친 소 수입, 입시지옥화와 의료 민영화 추진

이명박은 탄핵돼야 마땅하다

1면에서 이어짐

“광우병 소도, 의료보험 민영화도, 이명박의 부자들을 위한 정책도 너무 싫다”는 한 여고생의 발언은 정확하게 이 정부의 계급적 성격과 잘못된 정책을 지목했다. “미친 소 먹고 민영 의료보험 때문에 돈 없어 죽거든 대운하에 뿌려 주오”라는 말도 유행하고 있다. 청소년과 청년·학생들은 “미친 소뿐 아니라 미친 교육도 막아내자”며 투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은 온갖 거짓말로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발악하고 있다. 미국 축산업계 광고대행사로 나서서 국민의 혈세로 ‘미국 정부를 믿어야 하고 미친 소는 안전하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해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 누리꾼은 “조중동 같은 악질적인 신문사 윤전기에 모래라도 뿌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저들은 또 ‘어차피 미국 국민들과 재미교포들도 먹어 왔다’, ‘광우병 걸릴 확률은 골프치다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 ‘유기농 과일도 1백 퍼센트 안전하지는 않다’는 등 어처구니없는 논리들을 들이대고 있다.

그러나 광우병 연구 권위자인 서울대 수의학과 우희중 교수는 ‘초기 서너 명 사망자로 시작해 현재 수천만 명의 사망자를 낳은 에이즈’와 마찬가지로 “광우병은 긴 시간을 통해 자연계에 형성된 종 간 장벽을 인간이 파괴해 등장한 질병”이라며 재앙을 경고했다.

“미국에서 한 해에 소 40만 마리가 광우병 유사 증세를 보였다”는 서울대 보고서도 공개됐다. 따라서 이제 와서 “국민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이명박의 변명은 구역질만 나게 할 뿐이다.

어린이날에 청와대로 아이들을 초청한 이명박은 “대통령 할아버지가 나쁜 어른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지켜줄 거예요” 하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모두의 생명과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나쁜 어른들’은 바로 이명박, 한나라당, 조중동이다.

우리의 삶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엉망으로 마무리한 광우병 쇠고기 수입 협상을 애초에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다. 그러나 현재 통합민주당은 거대한 촛불의 바다에 밀려 자기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협상 무효와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한미FTA가 “되도록 빨리 비준돼야 한다”(손학규)는 통합민주당이 자신들도 개방을 추진해 온 광우병 쇠고기를 진지하게 막을 거라고 믿기는 힘들다. 민주당은 벌써 “외교 마찰 우려”를 말하며 주춤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한미FTA와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일관되게 반대하고 싸워 온 것은 강기갑 의원과 민주노동당밖에 없다.



촛불은 더 크고 강력하게 타올라야 한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학교 자율화’, 의료민영화 등을 막고 고장난 이명박 불도저의 시동을 꺼 버리려면 촛불의 바다가 더 크고 강력하게 성장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이명박과 조중동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경찰은 ‘불법’과 ‘사법 처리’를 들먹이며 공격하고 있다. 지금 정보과 형사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쥐새끼’처럼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캐고 다닌다고 한다.

5월 3일 국가정보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명박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국가정보원장 김성호(삼성떡값검찰 출신)를 닥달했다. 독재정부 때 반정부 인사들을 미행·감시하고 잡아 가두던 짓을 빨리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부정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막강하자, 정부는 물러서는 척하며 “촛불문화제 개최는 허용하되, 정치적 구호나 플래카드, 피켓 등은 사법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명박을 비판·조롱·폭로하지 말고, 모여서 노래만 부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플래카드, 팻말, 구호 등은 운동의 요구를 표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며 운동을 성장·발전시키는 데 효과적인 무기들이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에게 이런 무기들을 빼앗고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서 이 운동이 더 크게 성장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

그 점에서 이 운동의 출발에 큰 기여를 한 ‘2MB 탄핵 투쟁 연대’ 운영진이 5월 6일 저녁에 청계광장의 촛불집회와 별도로 여의도에서 “구호 주장 금지, 깃발 금지, 피켓 금지”를 내세우고 침묵시위만 한 것은 다소 아쉬운 일이었다.

촛불의 바다는 더 거대해져야 하고, 청와대 근처·수도 한복판이라는 정치적 상징성과 많은 인파로 시위 효과가

큰 광화문 쪽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2MB 탄핵 투쟁 연대’ 운영진이 5월 7일부터 다시 청계광장에서 힘을 합치기로 한 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의 바다를 사그라들게 하려고 야비한 이간질도 시도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장 한진희는 “순수하게 국민 건강을 우려하는 문화 행사를 하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이를 이용해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은 처벌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 ‘괴담과 괴문자’ 유포자를 찾아내 처벌하겠다는 말도 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이주노동조합 지도부와 대표적인 비정규직인 이랜드 노조 지도자를 긴급 체포 구속한 것도 여러 운동이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과 만나고 확대될 것을 막기 위한 반격의 일부이다. 따라서 어떤 이간질과 탄압, 각 개격과 공격에도 함께 맞서며 탄압받는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

쥐새끼

5월 6일 1천5백여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해 출범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이런 공격에 맞서며 촛불의 바다를 더욱 거대하게 타오르도록 하는 구실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다양한 쟁점과 운동들 — ‘학교 자율화’,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의료 시장화, 파병 정책 등 — 을 연결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국회 안에서 유일하게 이 운동의 목소리를 대변할 자격이 있는 민주노동당도 더 분명하게 그런 구실을 해야 한다. 이명박 탄핵 서명이 1백만 명을 훌쩍 넘은 지금, 민주노동당이 이런 목소리를 흠뻑 받아 안아 이명박 탄핵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다소 아쉽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이 운동에 결합해야 한다. 비정규직 확대·공공부문 민영화·정리해고 등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한 것이며, 파업 등을 통해 주요 대기업과 기간산업을 뒤흔들 수 있는 노동자들의 힘이야말로 정부를 물러서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월 3일 여의도에서는 공무원 노동자 2만 5천 명이 연금 개악과 공무원 퇴출항의 집회를 했는데, 만약 이 대열이 그날 저녁 청계광장으로 이동해 촛불집회에 결합했다면 이명박은 그야말로 등골이 오싹했을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전 조합원에게 촛불문화제 참가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 운수산업노조는 “우리 손으로 미친소를 운반하지 않겠다”며 운송 거부를 선언했다.

이런 움직임이 더 커져야 하고 6월 말~7월 초로 잡혀있는 민주노총 총력 투쟁 일정을 더 앞당길 필요도 있다. 가장 유리한 상황이 눈앞에 있는데 노동자와 이명박의 한판 대결을 두 달 뒤로 미룰 이유는 하나도 없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미친 소 하역과 운송 거부를 선언한 운수산업노조 웹사이트는 지금 폭주하는 지지 글로 다운돼 버렸다.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5월 17일에 동맹 휴교를 하고 거리로 나서자는 핸드폰 문자와 싸이 쪽지가 번져가고 있다고 한다. 대학 총학생회도 동맹 휴업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교조 교사들이 연가 파업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거리로 나선다면 멋진 일이 될 것이다.

〈조선일보〉는 “무슨 암초에 부딪혀 이 정부 국정운영에 구멍이 뚫리고 가라앉게 될지 아슬아슬하기만 하다”며 걱정이 태산이다. 이 두려움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우석균 칼럼 메스를 들이대며

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가

누가 괴담을 퍼뜨리는가?

광우병 괴담 때문이라고 한다. 여중고생들의 '팬텀' 현상이라고 한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청계광장에, 여의도에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것을 '불순세력의 선동' 때문이라고 한다. 며칠 만에 1백만 명이 훌쩍 넘는 이명박 정부 탄핵 서명을 명의 도용이라고 한다. 도대체 무엇이 '괴담'이고 누가 '불순한 선동'을 하고 있는가? 위험한 것을 위험하다고 하고 잘못된 정부의 정책을 잘못된 것이라 말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요구가 괴담인가? 아니면 이들을 선동에 놀아나는 무지몽매한 대중이라고 말하는 정부와 조중동이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가?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아니라 정부와 조중동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 정부의 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라면 왜 유럽과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수입을 아예 거부하는가? 왜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부위 제한과 연령 제한을 통해 수입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는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 정부만 말하고 있는 주장을 과학적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와 조중동이야말로 괴담을 퍼뜨리는 당사자다.

반미 선동

검역 주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이 괴담이고 반미 선동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에 수입하는 도축장의 승인권을 아예 미국에 넘기고 승인 권한을 포기했다. 미국에서 광우병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해도 한국이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 심지어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의심돼 미국산 쇠고기를 더 꼼꼼히 조사하려고 해도 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거부할 수도 없다. 이를 한국의 결정권을 미국 정부에 넘겼다고 즉, '주권을 포기했다'고 하지 않고 어떤 다른 설명이 있는가? 제발 가르쳐 달라 조중동.

이제 정부는 괴담을 넘어 아예 코메디까지 한다. 신문 1면에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광고가 실린 것을 보고 나는 미국 육류협회 광고인 줄 알았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광고다. 5월 6일 정부의 기자회견장에는 LA 한인회장까지 등장했다. 다음부터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장에 재유럽 한인회장과 재일동포회장을 동석시켜서 발언을 해야 할까?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다고? 그럼 나머지 세계인구 40억 명은 왜 안 먹는데? 2백만 명이 넘는 재미동포는 먹는다고? 그러면 재중동포와 재일동포, 재유럽동포들 5백만 명은 왜 안 먹는데? 이쯤되면 개콘이나 웃찾사를 따로 볼 일이 없다.

미국에서 아무리 안전하다고 주장해도 다른 나라에서 먹지 않는 이유는 미국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렌더링 산업 즉, 미국



미국 농무부의 육류 검역 가이드 라인에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음을 풍자한 미국의 만평

의 카길과 콘아그라 등 거대 농식품복합체 자본의 일부인 '동물성 사료 산업'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조차 광우병 파동 이후 수십 년 전 통의 동물성 사료 산업을 포기했다. 소를 초식동물로 되돌린 것이다. 지금 유럽에서는 모든 농장동물이 동물성 사료를 먹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만 광우병 위험성을 대부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은 위험한 줄 알면서도 동물성 사료를 고집한다. 그러고서는 렌더링 산업을 유지하는 선에서 사료 제한 정책을 쓴다. 소를 돼지·닭에 먹이고 돼지·닭을 소에 먹이는 사료 제한 정책은 이미 유럽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밝혀진 지 오래지만 이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카길과 콘아그라, 타이슨푸드, 월마트 등 미국의 거대 다국적 농식품자본과 유통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다. 기업의 이익을 국민의 생명보다 위에 놓는 정책이 미국의 광우병 관리 정책인 것이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안전하지 않다고 취급하는 것이고 미국 쇠고기를 자국의 인간식량체계(human food chain) 속으로 끌어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정부가 그토록 과학적 기준이라고 강조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을 보자. 애초에 검역이나 국민 생명은 무역협정 대상도 아니었고 돼서도 안 된다. 국민의 생명이나 생태계가 무역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WTO가 출범하면서 위생검역협정(SPS)이라는 것을 만들고 이를 무역협정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이것부터가 문제다.

위생검역이 무역협정이 되면 국민 생명이 문제가 되니 우리는 당신네 조류독감 닭고기를 안 먹겠다고 해도 수퍼301조를 동원해 무역보복이 가능해진다. 또 위험성 입증 책임을 수출국이 아니라 수입국이 지게 된다. 생명과 환경문제가 직접 걸려 있는 검역위생 문제를 하나의 무역협정으로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처럼

만들었던 WTO 체제도 사회단체와 제3세계 정부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양보한 것이 바로 각국의 검역 주권이다. 국제기준(예를 들어 OIE 등)과 무관하게 각국이 알아서 검역위생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 예외규정은 국민 건강과 검역 문제는 무역협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광고 대행업체

그런데 정부는 검역위생에서도 국제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WTO나 위생검역협정의 의미와 역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한지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런 기구들은 강대국 정부와 그 정부가 대변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이해를 변호해 왔다.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나 미국 육류업체들의 광고 대행업체로 전략한 현실이 이를 너무나도 명백히 보여 준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에서 쇠고기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이명박이 한미 FTA의 최대 걸림돌이 치워졌다고 환호한 것에서 보듯 이번 쇠고기 전면개방은 한미 FTA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 한미 FTA는 무엇인가? 약값과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학생평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방송을 민영화하며 기업에 정부의 모든 공적 규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기업-정부 제소제도(ISD)를 도입해 기업에게는 특혜를 주고 국민에게는 교육, 의료,

물, 전기, 가스, 공영방송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협정이다. 한미 FTA도 광우병 쇠고기 수입처럼 국민의 생명보다 이윤을, 국민의 권리보다 자본의 이익을 위한 협정이다.

탄핵

그리고 그 이윤은 단지 미국 자본의 것만이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했을 때 이익을 보는 집단이 미국의 카길이나 콘아그라만은 아니다. 한국의 급식업체들과 유통업체, 외식업체들이 '값 싸고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목 놓아 기다리고 있다. 3조 4천억 원(2006년) 규모의 한국 최대 급식업체들은 다름 아닌 LG아워홀, 삼성에버랜드, CJ푸드 등이다. 쇠고기 유통업체가 이마트, 홈플러스, LG마트 등인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통해 폐돈을 버는 세력들은 미국 자본만이 아니라 국내 재벌과 그 언론사들이다. 재벌 프렌들리를 선언한 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는 이유이다.

교육자율화, 의료 민영화도 마찬가지다. 사학재벌과 대형학원의 이익을 위해서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학생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고, AIG와 삼성생명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을 깨버려도 상관없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들이다. 국민들을 다 죽이려 한다는 것이 괴담인가? 교육, 의료, 공기업 민영화, 대운하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들이 다 실현되면 지금도 어려운 서민들은 정말로 죽어갈 수밖에 없다. 죽기 싫다고 살자고 지금 시민들이 외치고 있는 '이명박 탄핵'은 따라서 전적으로 정당하다.

괴담을 퍼뜨리는 자가 누구인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괴담을 퍼뜨리는 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다. 교육과 의료는 권리가 아니라 시장에 맡겨야 하며 물, 전기, 가스, 방송은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한 놀이터라는 괴담을 퍼뜨리는 것은 다름 아닌 이명박 정부다. 촛불시위는 이러한 '괴담' 정책을 집행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더욱 커지고 강력해져야 한다.

※ 5월 7일에 열린 광우병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하기도 한 우석균 정책실장은 오는 10일 다함께 개최하는 시국 강연회에서 연설한다. (12면 참고)

주간 <맛불>을
정가구독
하십시오

-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 1년 /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www.counterfire.or.kr / reader@counterfire.or.kr / 전화 : 02-2271-2395
계좌 번호 : 국민은행 048402-04-014849(예금주 : 백은진)



미친 소뿐 아니라 한미FTA도 막자

지난 4월 17일 광우병 쇠고기 협상 타결 소식을 들은 이명박은 기뻐서 박수까지 치며 “한미FTA의 걸림돌이 됐던 쇠고기 문제가 합의됐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가 시행되면 소비자가 많은 혜택을 입고 일자리도 크게 늘다며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 논설실장 송희영은 한미FTA의 핵심 목적은 “더 많은 피를 흘리고,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 수 있는 경쟁 체제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자·서민 등 국민 90퍼센트의 삶을 파괴하는 대가로 기업주와 부유층 등 10퍼센트 사람들이 이득을 얻는 것이 한미FTA의 본질이다.

공공서비스 사유화와 가격 인상

한미FTA는 물·전기·가스·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전환하면서 철도 요금을 대폭 올린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한미FTA는 이런 움직임을 전면화할 것이다. 수도 사유화 후 하루아침에 수도 요금이 30배나 오른 볼리비아의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니다.

심지어 공공서비스들이 재벌과 다국적 기업의 사유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실제로 “국제 기준에 맞춘다”며 우편서비스 사유화를 한미FTA 협정문에 포함시켰다.

국민 건강과 환경 파괴

한미FTA는 약값을 대폭 인상해 평범한 사람들의 부담을 늘릴 것이다.

한미FTA가 타결되면,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값싼 복제약이나 약효가 유사한 신약 판매를 오랫동안 금지할 수 있다. 환

자들은 1년에 1조 원 정도의 약값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한미FTA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영리 병원 도입을 합법화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부자들은 민영 의료보험으로 빠져나갈 것이고 건강보험에 남은 평범한 사람들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감수해야 한다.

또, 한국 정부는 미국의 특정 주(州)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더라도 미국산 닭고기 전체를 수입 금지할 수 없다는 조건을 허용했다.

우리 건강과 삶을 파괴하는 2인조 강도

한국 정부는 한미FTA를 체결하려고 배기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매기는 제도를 폐지했다. 우리에게 매연을 더 많이 마시라는 얘기다.

공공·복지 정책 포기

한미FTA에는 ‘투자자-정부 소송제(ISD)’라는 것이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가가 공익을 위해 펼치는 정책이 기업의 돈벌이에 방해가 되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한국 정부가 집값을 낮추는 정책들을 펼쳐 기업들의 땅 투기에 방해가 된다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주택·토지 공개념’ 제도나 ‘1가구 1주택 법제화’가 제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또, 비정규직을 실질적으로 정규직화 하는 법률이나 환경 보호 정책,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 등도 기업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정돼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유로운 문화 활동 방해

한미FTA는 모든 문화 활동을 이윤 논리에 종속시키려 한다. 한미FTA 협정문을 보면, 캠코더는 물론 카메라 달린 휴대폰으로 영화의 한 장면을 찍어도 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허락없이 퍼 나르기만 해도 지적재산권을 위반했다는 핑계로 웹사이트나 개인 블로그, 포털 사이트까지 폐쇄할 수 있다.

일자리가 없어진다

한미FTA가 시행되면 기업을 인수할 때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과 고용보장을 지킬 의무가 사라지면서 노동자들은 대량해고될 것이다.

한미FTA로 수출이 늘어 일자리가 늘 것이란 주장도 근거가 없다. 자동차를 비롯한 1백3개 주요 기업 중 91.3퍼센트가 한미FTA로 고용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섬유업체 중 절반은 오히려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4월 24일 인크루트 조사). 오히려 공공서비스를 이윤 논리에 따라 구조조정하고 사유화하면서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정리 김용욱

위기 속에 국가보안법의 발톱을 세우는 이명박

최미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계광장에 모여 분노의 촛불 행렬을 이룬 5월 3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은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간첩·보안 사범 수사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명박은 “안보와 국익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금 이들이 말하는 ‘안보’와 ‘간첩 수사 강화’는 무엇을 겨냥하는 것일까?

<조선일보>는 한 공안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쇠고기 시위’에 ‘반미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다며 광우병국민감시단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소속 단체들 — 민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다함께 등 — 을 거론했다. 이 단체들을 골라내서 공격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한 것이다.

2006년 간첩단이라고 조작·매도당했던 이른바 ‘일심회’ 마녀사냥 당시에도 <조선일보>는 효순·미선 압사 항의 운동, 탄핵 반대운동 등이 모두 ‘북한의 지령’에 의한 것이었다며 그 운동 참가자들을 모욕한 바 있다.

군사독재 시절, 정권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입막음하는 단골 무기로 사용되던 국가보안법이 이명박 정부에서도 변함없이 정권의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모욕

이명박 취임 후 두 달 동안 학교 ‘자율화’, 등록금 폭등, 물가 상승, 공공서비스 사유화, 의료보험 민영화 등으로 쌓여왔던 불만이 광우병 쇠고기 문제로 폭발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정부의 부당한 정

책에 앞장서서 반대해 온 진보단체들을 탄압해 운동을 위축시키려 할 수 있다.

지난 역사에서도 공안당국은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친북·반미’ 딱지를 붙이고 사회의 위험인물인 양 마녀사냥하고 속죄양 삼아 왔다.

정부와 공안당국은 일부 좌파가 억압적 독재국가인 북한을 ‘사회주의’라고 착각해 지지한다는 점을 악용해 마녀사냥을 정당화해 왔지만, ‘간첩’과 ‘친북’은 핑계였을 뿐이다.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을 통해 진보진영 전체를 매도하고, 사상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지 못하게 막고, 국가의 탄압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군사독재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수십 년이 지나 모두 무죄로 밝혀진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은 말

할 것도 없고 소위 ‘민주화’된 시대에도 국가보안법은 늘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고 사회분위기를 우익이 주도하게 만드는 구실을 해 왔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간첩’ 사건인 송두율 교수 사건과 이른바 ‘일심회’ 사건 때 공안당국과 보수언론들은 이 사건 관련자들이 무시무시한 대남공작원인 것처럼 부풀려 사회 분위기를 얼어붙게 하고 진보단체들을 고립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나중에 혐의의 대부분 또는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결됐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부르짖는 ‘보안사범’ 수사 강화는 바로 반이명박 운동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본질을 이해해야 나와 사상이 다르거나 ‘친북’이라는 등의 이유로 마녀사냥의 희생자를 방어하는데 주춤거리는 잘못을 막을 수 있다.

이명박에 반대해 거리로 나선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에도 함께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부자들을 위한 이명박 랜드

입시지옥과 사교육 천국을 위한 2MB 교육 정책

박조은미(‘청소년 다함께’ 활동가)

5월 2일과 3일 촛불집회에서 두드러졌던 것은 전체 참가자의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었다. 청소년들의 움직임에 놀란 정부는 청소년들을 ‘선동’하는 정치조직이 있을 것이라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청소년을 참가 ‘배후’는 다름 아닌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분노다. 청소년들의 자유발언에는 광우병뿐 아니라, 특히 교육 문제에 대한 성토가 많았다.

이명박 정부의 불도저식 교육 정책은 극심한 경쟁 강화와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다. 당장 교육 정책이 발표되는 족족 급등하는 것은 사교육 관련 기업 주가다. 이명박의 ‘반값 사교육비’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영어몰입교육은 학생들에게 학습 부담을,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부담을 증폭시킬 것이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대표적인 고교서열화 정책이다. 자립형사립고 1백 개와 특성화고 50개를 증설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특목고 사이의 서열을 더욱 체계화하고 그 문으로 진입하기 위한 경쟁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미 학원가에서는 특목고 대비 학원이 뜨겁게 주목받고 있다.

일제고사, ‘학교자율화’는 청소년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와 닿기 때문에 더욱 분노가 뜨겁다. 성적을 공개하고 우열반을 만드는 등의 경쟁 강화와 0교시, 야자 같은 학습 부담 가중이 지금도 충분히 괴

로운 청소년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최근 ‘학교자율화’ 방침 발표 이후 성적 공개 등의 스트레스 때문에 한 학생이 자살을 하기도 했다. 서울지역 학생들 80퍼센트가 ‘학교자율화’에 반대하고 청소년들 70퍼센트가 영어몰입교육에 반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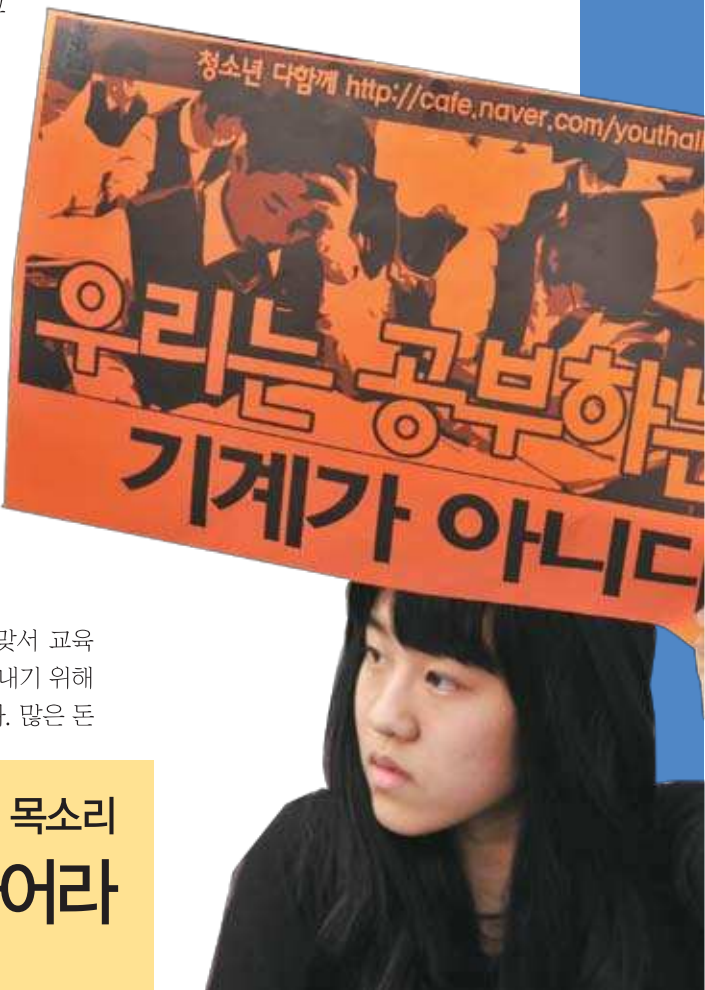
지금의 청소년들은 이런 경쟁 틀바구니에서 ‘개천의 용’이 되길 기대하기가 요원한 세대다. 이미 초등학교 10명 중 9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고 중고등학생 70퍼센트가 사교육 행렬에 함께 하고 있다. 고등학생은 평균 월 40만 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한다. 물론 사교육비에도 엄청난 양극화가 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가정의 학생들은 이런 사교육비 경쟁에서 도저히 살아남기 어렵다.

한편 대학 등록금도 1천만 원을 넘어서며 고공행진 중이다. 청소년들은 교육의 시장화와 전 사회적인 양극화가 가져오는 사회적 불안감 속에 불투명한 미래 안고 살아야 한다. 지난 촛불시위는 이러한 ‘예비 88만 원 세대’의 분노의 폭발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맞서 교육 공공성과 청소년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더 욱 커다란 저항이 필요하다. 많은 돈

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유세를 걷어 질 좋은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청소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대학서열화를 없애기 위해 모든 대학을 평준화해야 한다. 경쟁과 적자생존의 교육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이런 대안은 머나먼 꿈 같지만 실제 프랑스에서는 학생들이 앞장서고 노동자가 함께한 1968년 반란을 통해 무상교육이 확대됐고 대학평준화가 이뤄졌다.

일관된 이명박 정부의 시장화, 경쟁 강화 정책에 맞서 우리도 일관되게 교육 공공성과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맞불을 놓아야 한다.



의료보험 민영화는 노리는 것

삼성생명하고 현대병원에게 더 많은 이윤을

변해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청계광장에서 “광우병에 걸려 병원에 갔다가 의료보험이 민영화돼 치료를 못 받아 죽으면 대운하에 뿌려 주오”라는 팻말을 보고 무릎을 쳤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제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라고 속인 이명박 정부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파괴하는 또 하나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바로 의료보험 민영화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보험 민영화 프로젝트’는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에서 국가의 책임을 줄이고 보험회사와 제약회사, 병원 자본 중심으로 재편해 결국은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 환자들을 안 받는 병원을 만드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병원들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치료하도록 하는 것] 폐지가 전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분위기가 되자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의료보험 민영화 프로젝트의 실제 내용이 변한 것은 없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예산 지원분을 축소하고 환자가 직접 내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인상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건강보험이 축소되면 결국 건강보험은 유명무실해지고 삼성생명의 시장은 늘어나 결국 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진다.

삼성생명은 지난 5월 4일 민영 의료보험 시장에 집중하겠다고 밝

혔다.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회사들에게 넘겨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전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는 개인 병력만이 아니라 어느 병원을 자주 이용하며 얼마의 의료비를 내는지, 한 사람의 가족력과 하다못해 사돈의 팔촌의 병력까지 알 수 있는 정보다. 이러한 국민 개인질병정보가 삼성생명하고 같은 보험회사에 넘어가면 보험사들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맞춤형 보험 상품 설계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시 보험금을 높여 받거나 병이 많은 사람은 보험 가입을 안 받을 수 있다.

또, 고박고박 보험료를 내고도 보험금 지급시 과거에 질병에 걸렸다는 핑계로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 넘겨주는 나라는 없다. 개인질병정보는 국가기관 까리도 넘겨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무식한 2MB가 이를 하겠다는 것이다.

좌지우지

이명박 정부는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했다. 바로 이번 5월 입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병의원고 민영의료보험사 간의 ‘환자유치 우선행위 허용과 자유계약’에 관한 법이다.

지금은 환자 소개를 병원끼리만 할 수 있고 치료는 병원이 정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환자 소개를 할 수 있게 되면? 삼성생명은 가입자에게 삼성병원이나 네트워킹 병원을 소개할 수 있게 되고 그 병원에 환자들을 보내는 대신 얼마를 주겠다고 계약을 하게 된다. 병원은 삼성생명이 결정한 범위에서만 치료를 해야 삼성생명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의사가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생명이 치료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보험회사가 병원을 좌지우지하고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치료 제한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이명박이 내놓은 새로운 의료민영화 시나리오다.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 <식코>는 바로 이런 의료보장 시스템이 있는 미국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이명박 정부가 “한국의료의 미래”라고 칭송한 미국식 의료제도에서는 전국민건강보험이 없고 민영보험회사들이 병의원을 소유하고 있다. 절단된 손가락 하나 꺾매는 데 최소 6천만 원을 써야 한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 정말 그냥 죽어야 하는 나라다. 국민의 70퍼센트가 전국민건강보험을 원해도 AIG 같은 민영보험회사의 반대와 로비로 도입되지 못하는 나라다. 돈이 없으면 환자를 병원 대낮에 거리에 버리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도 마찬가지다. 삼성생명하고 AIG, 삼성하고 현대병원에 더 많은 이윤을 가져다 주기 위해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게 넘겨주고 환자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소시켜 결국 건강보험을 고사시키겠다는 것이다.

광우병 쇠고기 도 의료 민영화 정책도 생명보다 이윤이 더 중요하다는 저들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논리에서 나온 것이다. 광우병과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중단시켜야 한다.



미친 소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 총결집

“광우병, 괴담 아니라 진실”
“촛불집회는 사주한 결과 아니라 민심이다”

한수영

5월 6일 ‘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출범했다. 여기에 무려 1천5백여 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인터넷 모임이 참가했다. 이날 여의도에서 촛불집회를 연 ‘2MB 탄핵투쟁연대’ 카페 대표도 앞으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함께 청계광장 촛불집회에 참가하겠다는 의결을 전해 왔다.

이토록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가한 것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엄청난 대중적 공분을 반영한 것이다.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연일 거리에서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강력한 시민행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개최 배경이라고 밝혔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이에 공감하며 이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촛불집회를 책임 있게 주최하고 국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4대 요구사항으로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무효화 및 재협상, 협상책임자 파면, 이명박 책임 표명 및 대국민 사과, 특별법 제정을 확정했다. 또, 지속적인 촛불문화제를 열고, 항운노조·운수노조와 협력해 미국산 쇠고기 하역과 유통을 봉쇄하겠다는 등의 행동계획도 발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네티즌,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국회의원 등 각계의 발언은 모두 ‘민심’을 전하는 절절한 목소리였다. 강기갑 의원은 이번 협상은 “엄밀정장 활동무게 협상”이니 “죽을 각오로 싸워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효화시켜야 한다”며 협상 저지를 강력히 호소했다.

네티즌을 대표해 발언한 ‘정책반대시위연대’ 카페 안누리 운영자는 “경찰이 [탄압의 빌미로 삼기 위해] 문화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명박 3행시[당송]는 시[당송]도 아니냐”며 재지 있게 따져 물었다.

민주노총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민예총 임진택 부위원장은 “평소 사회 문제에 관심도 없던 내 딸이 며칠 전 집회에 갔다 와서 나한테 이후 일정을 알려 주더라. 그럼 나는 내 딸한테 사주를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냐”라며 사주 운운하는 정부의 논리를 꼬집었다.

문화연대 김정명신 공동대표의 말처럼, 청계천에 그 많은 청소년이 모인 것은 “석차별 우열반을 하게 되고, 0교시 해야 되고, 야자까지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차별과 냉대 속에서 살아갈 길이 막막해 빛어진 울분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 때문이다.

민언련 김유진 사무처장은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통합민주당은 협상 무효화에서] 발 빼서 대중 뭉개고 가라고 했다. 만약 이렇게 하면 민주당은 미래 세대들한테 철저히 배려받아서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이석형 위원장은 “광우병 쇠고기 반드시 막아내야 하고 민주노총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배후가 있다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서 조용히 참가하겠다”고 한 것은 아쉽다.

촛불시위의 바통을 이어받아 노동자들이 나서야 투쟁은 더 강력해지고 확산될 수 있다. 최근의 대중시위에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더해져 미친 소 수입을 멈출 수 있다면 민주노총은 가장 존경받는 사회 세력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더 적극적·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청계광장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의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학교 친구들 전부 다 이명박 쓰레기라고 욕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이민 가야겠다고 했어요. 이명박 반드시 탄핵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모두가 다 들고 일어나야 돼요.

—한영고등학교 2학년 두 여학생

저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 왔어요. 일 년에 소고기는 한두 번쯤 먹어요. 근데 제가 여기 왜 나왔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제가 즐겨 먹을 수 있는 게 라면이랑 된장국이에요. 광우병 쇠고기 가루가 라면과 조미료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50대 후반의 성남시 거주 노동자

이번 대선 때 아침 일곱 시에 일어나서 투표장에 달려가 이명박을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게 엄청난 실망감이 밀려오고 있어요. 광우병에 걸려서 말도 못하고 좀비처럼 죽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명박의 성공신화나 불도저 정신보다 훨씬 위대한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불복종 정신인 것 같아요.

—40대 초반의 서울 강북구 거주 노동자

광우병 소도 그렇고, 의료보험 민영화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써서 너무 싫어요.

—의정부여고 학생

이명박은 광우병 쇠고기로 국민들을 다 죽이고 ‘나는 전설이다’고 주장할 사람입니다.

—주부 조연희 씨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저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찍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꼭 찍고 싶어요. 짬뽕로.

—40대 중반의 한 여성

학생들이 0교시 출석하려고 새벽에 일어나 미친 소 급식을 먹은 뒤 죽어 대운하에 뿌려지게 될 것이 염려된다.

—탈런트 정찬

우리 할머니가 리어가 끌고 폐지 모아서 저를 키웠는데 의료보험 민영화해서 아파도 병원에 못 가시게 되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울면서 발언한 여고생

교과서에는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따르라고 돼 있는데, 교과서가 판타지 소설입니까? 총만 안 들었지 전두환, 이승만과 다른 게 뭐죠?

—여중생

경찰이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잡혀가서 내 자식, 내 손주들이 미친 쇠고기를 안 먹는다면 1백 번이라도 잡혀 가겠다.

—이규호 씨

어른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시켜 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대체 언제 잠자고, 언제 밥 먹고, 언제 놀라는 것이냐.

—열 받아서 수원에서 올라왔다는 여중생

이명박의 공공부문 사유화는 요금 인상과 대형 사고를 낳을 것이다

승주

돈 되는 것이라면 교육과 의료까지 시장에 팔아 치우려는 이명박의 냉혹함은 공공부문 사유화 추진에서도 드러난다. 정부는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사유화 로드맵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배자들의 숙원 사업인 한미FTA도 공공부문 사유화를 재촉하는 구실을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년은 없다”며 올해 안에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겠다는 공기업 사유화·시장화는 물·전기·가스·철도 등 필수 공공재 가격을 폭등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1994년 철도를 사유화한 영국에서 선로시설을 헐값에 사들인 레일트랙은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를 줄이고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다. 그러나 철도 요금은 도리어 인상됐고 구간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이 적용돼 출퇴근 시간대에 가장 높은 요금이 매겨졌다.

돈벌이를 위해 안전과 편의를 도외시한 방침은 재앙을 불렀다. 1999년 31명의 생명을 앗아간 런던 패딩턴 역 열차 충돌 사고는 자동열차보호장치가 설치돼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 위험 신호를 그냥 지나친 열차를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이 장치를 도입하라는 요구를 레일트랙은 계속 무시해 왔던 것이다. 1년 뒤에는

열차 탈선으로 4명이 숨졌는데, 이 사고는 선로 균열을 방치해 발생한 것이었다. 성난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선로 보수와 시설 개선에 돈을 쓰기 시작하자 레일트랙의 경영 수지는 급속히 악화됐고 결국 2001년 파산했다. 영국 정부는 철도 사유화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고 시인하며 다시 공기업화할 수밖에 없었다. 사유화의 주된 명분인 ‘효율성’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보여 주는 것이다.

밑 빠진 독

한국 철도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철도

철도 사유화가 낳은 참사 - 31명이 숨진 1999년 영국 열차 충돌 사고

청을 철도공사로 전환하며 사유화 전 단계를 밟았다. 철도 요금은 대폭 올랐고 장애인·국가유공자·학생·유아 등의 할인 혜택이 축소·폐지됐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노선도 폐지됐고, 안전을 위한 차량 정비 주기는 연장됐다. 2002년 이후 철도 노동자 수는 15퍼센트나 줄었고, 2년 넘게 싸우고 있는 KTX 승무원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비정규직과 외주화(기업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외부 업체에 일감을 주는 형식. 종종 인건비를 줄이고 각종 책임을 회피하는 데 이용된다)도 확대됐다.

현재 한국전력의 발전 부문도 매각하기 쉽게끔 6개 자회사로 나뉘져 있다. 이

명박이 본격적인 전력 사유화를 추진하면 전기요금을 못내 촛불을 켜고 지내다 불타 죽은 빈민들의 비극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전력 산업 규제를 철폐하고 기업 경쟁을 도입한 이후 전기 도매가격이 수백 퍼센트 폭등했고 대규모 정전 사태가 여러 차례 벌어져 실리콘 밸리의 첨단 기기들이 멈춰서고 학교와 관공서가 문을 닫았다. 캐나다, 이탈리아,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전력 산업 사유화와 규제 완화 이후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잇따랐다.

수돗물이 사유화된 영국, 프랑스, 독일의 상수도 요금은 한국의 서너 배가 될 정도로 비싸다. 프랑스에서는 물 값이 1백50퍼센트 올랐지만 수질은 오히려 악화됐다. 사유화로 물 값이 한때 4백50퍼센트까지 올랐던 영국에서는 의학협회가 사유화 때문에 수돗물 안전성이 더 나빠졌다고 비판했다. 기업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낡은 수도관 교체 같은 기본적인 투자조차 꺼리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 상반기에 입법 예고할 물산업 육성법은 상수도 관리운영권을 국내외 기업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베올리아, 수에즈 등 다국적 물 기업이 각각 삼성, 한화와 손잡고 한국에 진출해 있다.

이명박의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는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서민들의 희생을 강요할 뿐이다. 이명박의 온갖 악행에 분노한다면 공공부문을 팔아넘기려는 시도에도 함께 반대하자. 지금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이명박의 사유화 쓰나미 저지를 위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우리 삶 구석구석을 모두 상품으로 만들어 팔아 치우는 정부에 맞서다 함께 싸워야 한다.

거짓말만 흘러넘치는 한반도 대운하

장호중

이명박 ‘삼질’ 정부의 핵심 정책이 침몰하고 있다. 얼마 전 여론 조사에서 한반도 대운하에 반대하는 의견이 90퍼센트를 넘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조차 다수가 이런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대운하 계획에 지지를 꺼리고 있고 대기업 CEO들 사이에서도 반대가 늘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해 온 거짓말에 말 바꾸기와 쟁점 회피하기를 더해 시간을 벌려 하고 있지만 이마저 쉽지는 않을 듯하다. 지난 4월 18일 청와대가 대운하 추진 실무에서 손을 떼고 한나라당에 공을 넘기려 하자 같은 당의 정책위의장 이한구가 “당에서 맡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아무도 부담을 떠안으려 하지 않자 청와대 홍보비서관 추부길은 한반도 대운하 구상이 “[꼭] 운하로만 생각하지 않고 [있고] … 강에 대해

서는 뭔가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물타기를 시도했다.

결국 진퇴양난에 빠진 이명박은 지난 2일 부동산 투기 광풍에 눈이 먼 영남 지역 5개 시·도지사들이 낙동강 운하 조기 추진을 건의했을 때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4월 18일에 열린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 참가한 대운하 지지 교수들도 군색한 주장을 늘어놓는데 급급했다.

배의 스크루가 돌면서 운하의 수질을 개선시킨다는 황당한 논리를 펴 온 것으로 알려진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는 “나는 일각에서 말하는 ‘스크루 박’이 아니다” 하고 열을 올려 “개그 프로그램보다 더 재밌다”는 평을 들어야 했다.

“미국 키시미강 운하 개발로 인해 환경파괴가 됐지만 … 부근의 디즈니월드는 …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다”며 환경파괴와 부동산 개발 광풍을 부추긴 박재광 교수는 “운하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황당한 논리를

퍼기도 했다.

한편 “홍수폭탄”, “세금폭탄”만 안겨 줄 이명박의 ‘삼질’ 정책에 반대해 온 한양대 홍종호 교수는 “물류 전환 효과에 대한 비판에 직면하자 ‘관광운하’, ‘지역개발운하’, ‘지구온난화 해결 운하’로 사업계획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정부의 말 바꾸기를 비판했다. 또 “1주일이 걸리다던 운행 속도가 1년 만에 24시간으로 줄었다 … 놀라운 기술 발전 속도”라고 꼬집었다. 수원대 이상훈 교수는 이명박이 죽은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식 밑 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며 근거도 논리도 없이 무조건 “회장님 방침”에 따르는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나 ‘불도저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앞세워 당선한 이명박이 자신의 핵심 경제 공약을 철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조차 포기했다가는 기업주들과 주류 정치권 내에서조차 정권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명박에게 끔찍한 악몽이 될 것이다.

대운하 건설 반대 운동을 비롯한 여러 사회 운동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명박 반대 운동과 결합돼 이명박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는 데 성공한다면 이 악몽을 현실로 만들 수도 있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탐욕이 낳은 비극

오늘날 HIV/AIDS는 죽음의 질병이 아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병처럼 투약과 건강 관리만 잘 하면 건강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생활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HIV/AIDS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질병 때문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죽는다.

지난 4월 28일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플러스’가 연 ‘지속가능한 에이즈 치료를 위하여’ 토론회에서 발표한 윤가브리엘 나누리 플러스 대표도 제약회사의 탐욕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가브리엘씨는 국내에 공급되는 에이즈 치료제들에 내성이 생겨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신약이 필요했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약들은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1년에 수천만 원이 든다. 푸제온이라는 치료제는 2004년에 이미 건강보험에 등재됐지만 다국적 제약회사 로슈는 한국의 보험약가가 싸다는 이유로 공급을 거부하고 있다.

제대로 치료제를 쓸 수 없어서 면역력이 낮아진 가브리엘씨는 장, 신경계, 망막 등이 망가졌고 죽음의 문턱까지 다녔다. 그에게 처음 내성이 생겼을 때 푸제온이나 다른 신약들을 쓸 수 있었다면 상황은 전혀 달랐을 것이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특허권을 통한 독점으로 엄청난 이윤을 누리고 있다. 다국적 제약회사 BMS는 최근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 약가협상에서 한 알에 6만 9천1백35원을 요구했다. 약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가지고 돈잔치를 벌이려는 것이다.

‘기업 프렌들리’와 의료시장화에 안달인 이명박 정부가 제약회사들의 이윤을 제약하는 데 의지가 있을 리 만무하다. 따라서 환자들과 의료 공공성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투쟁으로 제약회사에 맞서야 하고, 돈이 아니라 생명이 우선인 사회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

이나라

우익 정권을 몰아낸 2003년 볼리비아 광부들의 파업 – 이런 강력한 기층 운동이 우익을 물리칠 수 있다

갈림길에 선 볼리비아

마이크 곤살레스

볼리비아는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서 있다. 볼리비아의 가장 큰 주(州) [산타크루스]에서 지난 주말[5월 4일 일요일]에 치러진 자치권 확대에 관한 주민투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에보 모랄레스 정부를 뒤흔드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

이 주민투표는 합법적 투표가 아니었고, 자치권 확대를 주장하는 자들의 승리도 뻔한 결과였다.

많은 좌파 단체 회원들은 투표하지 않았다. 투표에 참가한 사람들은 산타크루스의 신파시스트 조직인 UJC의 감시 아래 투표했다. 투표 날에 무력 충돌이 발생해 한 명이 죽고 30여 명이 다쳤다.

볼리비아는 ‘반(半)달’이라고 불리는 동부에 부의 대부분이 집중돼 있다. 동부의 4개 주 중 가장 부유한 산타크루스에는 대규모 콩 재배 농장이 있을 뿐 아니라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돼 있다.

2005년 말에 에보 모랄레스가 당선한 이래로 동부 주의 엘리트들은 좌파 개혁 조치들의 도입을 사사건건 가로막아 왔다.

그들은 제헌의회 구성을 방해했고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에 관한 논쟁을 지역 자치권 문제로 왜곡시켰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준이 아니다. 동부 엘리트들은 독자적 외교 정책을 펴고, 군대를 양성하고, 중앙과 분리된 사법 체제를 갖추는 등 사실상 독립된 정부를 꾸리려고 한다.

자치 주민투표는 동부의 부유한 대지주와 기업인 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빈농과 원주민 공동체 구성원 들은 엘리트들이 산타 크루스를 통치하면 사회·경제 정의 문제가 홀대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동부 엘리트들은 지난 2백 년 동안 볼리비아를 통치해 왔다.

모랄레스는 동부 엘리트들의 강력한 힘에 도전해 수백 년 동안의 볼리비아 자원 쟁탈전에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 부를 재분배하겠다고 약속해 당선했다.

모랄레스는 1990년대 말부터 볼리비아를 뒤흔든 대규모 기층 대중 운동 속에서 부상했다. 1999년 코차밤바 주민들은 물 사유화에 맞서 성공적으로 싸워 물을 공공의 소유로 되돌릴 수 있었다.

그 이후로, 원주민 공동체와 대중 조직들의 투쟁 — 특히 천연가스와 석유 자원의 통제권이 중요한 의제였다 — 으로 볼리비아의 세력균형이 바뀌었다.

국유화

모랄레스는 천연가스와 석유 자원의 국유화를 자신의 [개혁] 전략의 매우 중요한 고리로 삼았다.

모랄레스는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인데 볼리비아에서 원주민은 억압과 차별을 겪어 왔다.

볼리비아 인구 중 65퍼센트가 원주민 문화권에 속하며 대부분 게추아어(語)나 아이마라어(語)를 사용한다. 그러나 볼리비아 통치자들뿐 아니라 대지주, 기업인, 군 장성 들 대부분이 백인, 즉 ‘크리오요스’[라틴아메리카 출생 백인]다.

백인 엘리트들은 원주민 광부들이 고지대에서 극단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으며 힘들어 채취한 은과 주석으로 부를 축적했다.

1970년대 주석 광산이 폐쇄되기 시작하자 에보 모랄레스를 포함해 많은 광부들이 코차밤바 계곡으로 이주해 코카를 재배하거나 산타 크루스와 다른 동부 지역에서 일 자리를 찾았다.

그곳에서도 그들은 고된 노동을 해야 했다. 코차밤바의 대중 투쟁과

함께 그런 현실이 변화하기 시작하자 국제 자본은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자치 주민 투표는 부자와 권력자들의 반격 수단 중 하나다.

그들은 안데스 고원의 라파스에 근거한 모랄레스 정부가 볼리비아의 부와 자원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려 한다.

그러면 이 자원들은 산타 크루스의 부자와 권력자 들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수중으로 들어갈 것이다.

산타 크루스 엘리트들은 주민투표 운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적 말을 사용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국제 자본의 이해관계가 있다.

최근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대중 투쟁과 급진 정부는 정치적으로 능동적인 공동체와 대중 저항 운동에 기반한 대안 권력을 상징해 왔다. 이것이 지금 엘리트들의 공격으로 위협에 처해 있다.

이 주민투표가 공정한 선거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주요 도시 밖에서 많은 원주민과 농민 조직들은 치열한 반대 운동을 벌였고, 투표함이 불타고 바리케이드가 세워졌다.

지금 판돈이 매우 크다. 단지 한 정부의 존망이 아니라, 볼리비아 운동의 미래가 걸려 있다.

지난 2년 동안 자본가들은 급진적 신헌법과 완전한 농업 개혁 조치의 도입을 가로막아 왔다.

볼리비아의 대중 운동만이 엘리트들의 공격을 막아 낼 수 있다. 그들은 투쟁을 지속해야 하며, 우리는 그들의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마이크 곤살레스는 영국 글래스고대학교 스페인어문학부 부교수이고, 스코틀랜드의 신생 사회주의 정당 ‘솔리데리티’(Solidarity)의 당원이다. 국내에 번역 출판된 책으로는 《체 게바라와 쿠바 혁명》(책갈피)이 있다.

이스라엘 건국 60년, 점령과 학살의 60년

60년 전 5월 8일 원래 팔레스타인 영토였던 곳을 잔인하게 강탈하여 이스라엘 국가가 건설됐다.

당시 시오니즘 민병대들은 수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했고, 75만 명을 자기 고향에서 몰아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날을 ‘나크바’(재앙)라고 부른다.

그 이후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엄청난 탄압과 빈곤을 겪어야 했다.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사력을 사용해 서방 제국 주의의 이익을 보호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봉쇄하고 서안 지구에 불법 정착촌을 계속 건설

했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에 맞서 용감하게 투쟁해 왔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투쟁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이룰 수 없다. 아랍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이집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동계급의 반란은 친서방 독재 정권을 기층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집트 노동자 투쟁은 이스라엘과 제국주의에 도전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을 보여 주고 있다.

※ 다음 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를 자세히 다룬 글을 실을 예정이다.

버마 사이클론 피해는 체제의 문제다

버마에서 사이클론으로 2만 명이 죽고 수만 명이 실종됐다. 이재민도 수천 명이 발생했다. 많은 버마 사람들은 작년에 민주화 시위를 진압할 때는 신속하던 정부가 이재민들을 돕는 데는 매우 굼

뚝 것에 분노하고 있다. 자연재해가 꼭 이렇게 큰 인명 피해를 낳는 데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 전 세계 인구의 10퍼센트는 홍수와 해일 피해를 입기 쉬운 지역에 살고 있다. 기후변화와 그런 위험한 지역으로의 이주 때문에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반복

만약 방글라데시, 버마,

중국, 타이 해변 지역에 사전 대책과 긴급 구호체계가 갖춰져 있었다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위험 지역에서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정책과 기후 변화의 악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는 이윤이 나지 않는 곳에 돈을 쓰는 데 매우 인색하다. 간단히 말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가장 기초적인 정책들이 ‘실행 가능’해지기에는 자본주의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윤이 너무 적다.

미국 노동자들이 반전 파업을 벌이다

지난 5월 1일 미국 서부 해안에서 일하는 수만 명의 항만 노동자들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략과 전쟁에 항의해 파업을 벌였다.

서부항만노조(ILWU) 소속 노동자들은 워싱턴에서 샌디에고에 이르는 약 30여 개 항구들에서 파업을 벌였고 수십억 달러 어치의 화물들이 하역을 하지 못했다.

그동안 ILWU 노동자

들은 반전 시위에 참가해 왔지만 대규모 반전 파업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같은 날 미국 전역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메이 데이 기념 시위를 벌였다.

ILWU 노동자들의 행동은 전 세계적 연대 움직임을 촉발했다. 이라크 바스라의 항만 노동자들은 미국 노동자들의 반전 파업에 연대해 몇 시간 동안 동조 파업을 벌였다.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 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종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해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만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청소년 포럼

광우병 쇠고기 수입, 학교자율화, 영어몰입, 학교 서열화, 파병, 대운하, 한미FTA, 사유화...

청소년, 2MB 정부 파헤치기

연사: 이영주(전교조 서울지부 수석 부지부장)

일시: 5월 10일(토) 오후 3시

장소: 미지센터 평화방(충무로역 4번출구)

문의: 010-6822-8692



대학 맑스주의 포럼

서울 북부지역 대학

《공산당 선언》출간 160주년 —

마르크스주의는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연사: 장병호(‘다함께’ 운영위원)

일시: 5월 15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고려대(추후 공지)

문의: 011-9952-6288

지역 사회 포럼

인천지역 사회포럼

교육, 의료, 물, 철도 —

사유화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가?

연사: 변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이상준(전국공공서비스노조 인천지역 본부장)

일시: 5월 15일(목) 오후 7시

장소: 인하대 6호관 220호

문의: 010-7556-5508 / 참가비: 2천 원

<http://blog.naver.com/alltgc>

광우병 쇠고기와 한미FTA

한양대

한미FTA와 광우병 쓰나미 —

누구를 위한 자유무역 협정인가?

연사: 박건희(수의사, ‘다함께’ 활동가)

일시: 5월 13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한양대(추후 공지)

문의: 010-6749-7949

강원대

미친 소 쓰나미와 한미FTA —

누구를 위한 자유무역 협정인가?

연사: 박건희(수의사, ‘다함께’ 활동가)

일시: 5월 14일(수) 7시 10분

장소: 인문대 3호관 122호

문의: 010-4150-5963

서울 북부 사회포럼

집중 해부—학생들을 환자로 만드는

이명박의 환장할 교육정책

연사: 하재근(학벌없는사회 사무처장)

일시: 5월 29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인권실천시민연대 5층 교육장

(4호선 한성대입구역 7번 출구)

문의: 010-9191-1917 / 참가비: 2천 원

1968 반란 40주년

서울 동부 사회포럼

‘1968 혁명’ 40주년 —

1968년 5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연사: 김인식(‘다함께’ 운영위원)

일시: 5월 15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건국대학교 상허관 109호

문의: 010-5581-0506 / 참가비: 2천 원

<http://blog.naver.com/atgforum>

서울 서부 사회포럼

‘68혁명’ 40주년 —

88만 원 세대에게 1968년은 무엇인가?

연사: 김인식(‘다함께’ 운영위원)

일시: 5월 14일(수) 오후 8시

장소: 새움넷(2호선 신촌역 1번 출구)

문의: 011-232-1905

<http://blog.naver.com/atgwestforum>

불편한 진실에 귀 기울이기

어느 조용한 날에 귀 기울여 보세요.

비정규직 정리해고,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의 절규

미국의 침략 전쟁, 폭격에 멎어가는 심장 소리들

뜨거운 지구, 가난한 사람들 삶터가 물에 잠기는 소리

물 · 전기 · 가스 · 철도 사유화, 대재앙으로 가는 열차 소리

사람보다 이윤이 우선인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건

광우병 쇠고기와 의료보험 민영화,

무한경쟁의 입시지옥과 비싼 등록금 고지서,

이윤보다 사람이, 경쟁보다 연대가,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차별이 아니라 존중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더 많은 땀들과 토론하고 실천합시다.

‘다함께’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아래의 활동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필요합니다. ‘다함께’는 민주적 토론과 논쟁에서 출발해 함께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 대학과 각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사회 쟁점과 대안을 토론하는 포럼을 개최합니다. 교육 문제, 경제위기, 역사, 전쟁, 여성 억압,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 매년 여름에는 50여 개의 다양한 주제로 국내 최대 규모의 진보 토론회인 “맑시즘”을 개최합니다.
- 이 사회의 감춰진 진실을 알리는 신문 <땀방>을 발간하고 판매합니다.

》행동

조중동 같은 기성 언론들은 진실을 은폐하려 합니다. 우리가 흠어진 개인으로 존재한다면 부당한 권력에 맞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회 변화는 대중 행동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습니다. ‘다함께’는 대학과 거리에서 사회 문제를 알리는 캠페인을 벌이고, 대중 행동을 함께 하면서, 자본주의가 낳는 온갖 불의에 맞서기 위해 노력합니다.

-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합니다.
- 의료 민영화와 교육 시장화, 공공부문 사유화, 한미FTA, 비정규직 차별 등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합니다.
- 미국의 침략 전쟁과 파병에 반대합니다.
- 성 · 성지향 · 인종에 따른 차별과 시민적 · 정치적 권리 억압에 반대합니다.



‘다함께’에 가입하세요

활동 소개 및 안내, 회원가입, 후원하기 등 각종 문의 사항은 02-2271-2395 또는 atgmail@nate.com 으로 연락주세요.

‘다함께’가 주최하는 포럼이나 강연회, 거리 가판에서도 얼마든지 물어봐 주세요.

웹사이트 : <http://www.alltogether.or.kr>

후원 계좌 : 국민은행 694701-01-227363(예금주 : 백은진)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박양수 뉴코아노조 위원장을 석방하라

민주노총과 함께 이랜드 노조도 '불법 폭력 시위 단체'로 지목한 이명박 정부가 5월 5일 어린이날에 가족과 함께 있던 뉴코아노조 박양수 위원장을 긴급 체포했다. 이러한 공격은 촛불시위로 공지에 몰린 이명박의 다급함을 보여 준다.

이랜드그룹 회장 박성수도 공지에 몰려 있다. 지난해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파업투쟁과 불매운동으로 5백억 원 이상의 매출 손실을 입었고, 3천억 원이 넘는 당기순손실, 대출상환 압박 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4월 영국계 사모펀드(투기성 자본)까지 끌어들여 4천억 원을 유치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홈에버가 경쟁업체인 롯데마트나 홈플러스로 매각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 홍콩 증시 상장도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이다.

현재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이랜드그룹의 홍콩 증시 상장을 막기 위해 원정투쟁에 나섰다. '홍콩 원정투쟁단'은 5월 1일 홍콩노총이 주최한 메이데이 집회에서 이랜드그룹의 비정규직 대량해고와 노조탄압을 알렸다.

메이데이에 참가한 홍콩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최저임금 제정) 뒷구호를 "이랜드투쟁 지지한다"로 외치며 연대해 켰다. 홍콩노총 위원장은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싸움은 바로 홍콩 노동자의 싸움과 같다"며 연대를 나타냈다.

지금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은 매장 앞 집회뿐 아니라 '이명박 탄핵'을 외치는 거대한 대중시위에 함께할 필요가 있다. 집회에 참가한 젊은 이들에게 이랜드 투쟁에 연대해 줄 것을 호소한다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최영준



이명박의 공격에 맞서 5월 3일 투쟁을 시작한 공무원 노동자들

‘공무원 지옥’을 향한 2MB의 미친 질주

이명박 정부가 바라는 '공무원 지옥'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약으로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더니, 중앙부처 2차 구조조정과 함께 지방정부 1만 명 구조조정 계획을 내놨다. 지자체가 더 많은 공무원을 자를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도 주겠다고 한다. "공무원 목에 현상금을 걸고 마녀사냥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보수 언론은 공무원을 '신의 직장', '철밥통'이라고 비난하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다. 지난 10년간 '철밥통'이라는 공무원 퇴직자 4명 중 1명만이 정년 퇴직자였다(《2006 공무원연금통계》). 전체 퇴직자 중 42퍼센트는 아예 연금혜택을 못 받는 20년 미만 재직자였다. 많이 올랐다고들 하는 공무원 임금 역시 2004년 1백 인 이상 민간기업의 95.9퍼센트 수준이었다가 2007년에는 89.7퍼센트로 다시 떨어졌다.

정부와 보수 언론이 공무원에 대한 '신화'를 퍼트리는 것은 공무원 노동자와 비공무원 노동자 사이의 분열을 부추기기 위해서다. 공무원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공무원연금 개약과 구조조정을 성공하게 되면, 공기업 사유화

나 국민연금 개약, "근로기준법에 의해 과보호되고 있는"(노동부 장관 이영희) 민간기업 노동자를 더 손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공무원 노동자 투쟁의 승리는 전체 노동자 투쟁의 승리와 연결돼 있다.

정부의 시도에 맞서 싸울 분위기도 상승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말 17만 2천4백 명이던 공무원 노조원수는 3개월 만에 3만 명 가량 늘었다.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의 저항에 재갈을 물리려고 2004년 파업으로 해직됐다 복직한 투사들을 재징계하고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탄압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5월 3일에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전교조, 법원노조,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소속 노동자 무려 2만 5천여 명이 모여 이명박 정부의 공격에 맞선 투쟁을 시작했다.

'미친 소 수입'으로 반이명박 정서가 확산되는 지금, 공무원에 대한 공격과 노조의 손발을 묶으려는 정부의 시도에 맞서 공무원 노동조합들이 단결해서 싸워야 한다.

박천석(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외대 징계 철회 투쟁이 법정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다

지난 2006년 외대직원노조는 새로 취임한 박철 총장의 탄압에 맞서 2백여 일 동안 파업투쟁을 벌였다. 나는 그 파업을 지지한 학생이었고, 당시 파업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성희롱한 보직교수들을 비판하다 학교 당국으로부터 무기정학 징계를 당했다.

그 뒤 나는 학교 당국의 부당 징계에 맞서 투쟁해 왔고, 2008년 3월 26일, 법원의 '무기정학처분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에 힘입어 1년 7개월 만에 복학하게 됐다.

그리고 지난 4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무기정학처분은 무효"라는 조정안을 냈다. 그 뒤 보름여 조정기간 동안 양측 모두 법원이 내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결국 1년 9개월을 끌어 온 '무기정학처분무효' 소송은 "무기정학 무효"로 확정됐다.

이번 결정은 1년 9개월 동안 이어진 부당징계 철회 투쟁의 정당성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데 의미가 있다. 학교 당국은 가처분을 받아들여 나의 복학을 허락하면서도 "무기정학 무효"를 판결한 1심에 대한 항소는 이어가겠다며 고집을 부렸지만, 결국 교육기관으로서 위신만 더 추락한 꼴이 됐다. 복학한 출고생들에게 비슷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고려대 당국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법원이 "무기정학 무효"를 결정했고 학교 당국도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아직도 내 학적에는 '무기정학'이란 주홍글씨가 선명하게 남아 있다. 더구나 학교 당국은 부당하게 앗아간 내 청춘을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잃어버린 6백 일'을 되찾기 위한 법정투쟁을 시작하기로 했다. 학교 당국이 학생이 만든 표현물(대자보·유인물·현수막 등등)을 검열·재단하고, 심지어 그 내용을 빌미로 학생의 삶을 수년 동안 압류하는 끔찍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학생·노동자들의 지지를 호소한다.

조명훈



독자편지

letter@counterfire.or.kr 5월 12일(월)까지 독자편지를 보내 주십시오

유럽 반전 여론의 생생함을 느끼고 오다

얼마 전 유럽 여행을 다녀왔다.

한 동지가 유럽 여행을 가는 나에게 꼭 반전 티셔츠를 가져가서 입고 다니라고 권유했다.

처음으로 반전 티셔츠를 입고 숙소를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런던의 한 노동자가 나를 보고 큰 소리로 "우리는 전쟁을 멈춰야 한다" 하고 외치는 것이다. 그는 내가 멋있다고 칭찬했다. 나는 런던 노동자의 적극적인 행동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다. '정말 반전의 중심 런던은

다르구나' 하고 생각했다. 다른 런던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며 멋있다고 칭찬하곤 했다. 기차에서 만난 이탈리아 남성은 나의 반전 티를 보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런던에서 산 '팔레스타인 독립' 티셔츠를 입고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시장을 지날 때 시장상인들은 박수치며 멋있다는 제스처와 함께 "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이라고 외쳤다.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오기 위한 입국 절차 때 몸수색하는 프랑스인들이

팔레스타인 독립 티셔츠를 보고 "팔레스타인과 무슨 관련 있느냐, 팔레스타인에 다녀온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했더니 멋있다고 "팔레스타인은 독립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티벳에 자유를"을 마지막으로 외치며 인사하고 왔다.

유럽 여행을 하며 나는 유럽인들의 반전 정서를 느낄 수 있었다. 나 자신도 반전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고무받을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유혜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맞붙〉85호에 실린 '야간 노동 철폐하라! 임금을 삭감하지 마라!'는 기사를 읽고 20년 정도 주야간 교대근무를 해 오신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주야간 하는 것 때문에 1백 살까지 살 걸 80살까지밖에 못 살게 됐다며 웃으시곤 했습니다. 산재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신 적도 세 번(3도 화상인지 2도 화상인지 아주 심한 화상, 인대 늘어남, 어깨가 움직이지 않음) 정도 있으셨고요.

잠시 다른 얘기를 하자면, 아버지는 회사 인수합병 때문에 20년 가까이 일하시던 부서에서 낯선 부서로

옮기셨는데, 그곳에서 일하시던 중 어깨가 나가 입원을 하셨습니다. 산재 처리가 바로 돼야 했지만, 소위 말하는 '백'이 없어서 바로 되질 않았습니다.

'산재 쪽에 친한 사람 있었으면 바로 됐을 텐데' 하시더군요. 두 달인가 세 달인가 동안 산재 처리가 안 돼서 월급이 안 나왔었습니다.

주야간 교대 근무가 과연 없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기사를 읽고 꼭 없어져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프라인 신문은 두 번밖에 못 사봤지만 기사 잘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주연경

미친 소 하역 · 운송 거부 선언한 화물연대 김종인 위원장 인터뷰

“앞에 드러누워서라도 막겠다”



철도, 화물, 버스, 택시, 항만, 항공 등 6개 업종본부를 둔 민주노총 전국 운수산업노동조합이 미국산 쇠고기 하역과 운송 거부를 선언한 후 뜨거운 지지가 쏟아지고 있다. 지지금을 보내겠다는 시민들도 많다. 운수산업 노조 김종인 위원장을 긴급 인터뷰해 투쟁 의지와 계획을 들었다.



“우리 국민들이 먹고 다같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나와 내 가족도 똑같은 피해를 보는 데 우리가 하역 · 운송하는 게 맞냐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계획이 결정됐습니다. 조합원들도 지금 환영하고 좋아하고 있어요. 일단 부두에서 내리는 것을 막고 트럭으로 운송하는 것도 거부할 계획입니다. 그 앞에 드러누워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조합원들에게 알아보면 어느 부두에 언제 온다

는 것을 다 알아낼 수 있으니까, 그것을 공개해서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부두 앞에서 촛불집회도 할 것입니다. 미친 소 수입은 재앙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대기업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만만한 싸움은 아닐 거예요. 전 국민이 힘을 합쳐서 꾸준히 함께 싸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전국민적인 문제에 민주노총이 앞장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문화제에 함께 합시다

5월 9일에 이어서 **5월 16일 저녁**에도 촛불문화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이후 일정은 곧 문을 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웹사이트(www.antimadcow.org)를 보십시오.

촛불을 짓밟지 말라!

검찰과 경찰은 촛불문화제의 ‘배후’와 ‘유언비어’ 주동자를 찾아내 처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공정택은 ‘촛불 배후에 전교조가 있다’며 공격하기도 했다. 지난 3일 서울시 교육청은 집회 현장에 장학사들을 보내 청소년 ‘색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7일 오전에는 ‘괴문자’의 진원지를 찾겠다며 분당의 한 고등학교에 직접 경찰을 파견해 조사를 벌였다. 자신감에 찬 청소년들이 휴대폰 문자로 5월 17일 등교를 거부하고 시위를 하자는 메시지를 퍼뜨리자 공포에 질린 이명박이 시대착오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고, 문자를 보내고, 휴교를 제안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일 뿐이다. 이것을 억누르는 것은 독재정부나 하는 짓이다. 이명박 정부에 맞선 우리 운동은 옳은 게 집회 · 시위 ·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한수영

토르나 · 소부르를 석방하라

조명훈

지난 5월 2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토르나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이 합동단속반에게 강제 연행됐다. 이명박 정부의 ‘인간 사냥꾼’들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항의하는 촛불집회에 참석하러 집을 나선 토르나 위원장을 짐승처럼 끌고 갔다. 이들은 소부르 부위원장의 집 안까지 들이닥쳐 마치 흉악범을 체포하듯 잡아 갔다. 이명박은 비상 시국을 틈타 이주노조 지도자들을 공격한 것이다.

이주노조 지도부가 정부 단속반에게 연행된 것은 벌써 네 번째다. 지난해 2월 고등법원이 이주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에도, 이명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주노조에 대한 불법 · 표적 탄압을 앞장서 부추겨 왔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는 이번 이주노조 지도부 연행을 위해 이주노동자 행사에 연대 단체 활동가를 가장한 단속반원을 보내 염탐과 미행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던 일이 버젓이 벌어진 것이다.

표적 탄압

이주노동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을 마다않고 살아 온 사람들이다.

철저하게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고용 허가제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사기도 당하고, 일하면서 욕설도 듣고, 맞기도 하고 나쁜 일을 많이 겪어오”(토르나 위원장) 항의 한 마디 할 수 없다. 또 “[이주노동자들은] 12시간 일하고 한국 사람들이 2백만 원 받을 때 1백만 원도 못 받았다. 그런데 그마저도 체불된다.”(소부르 부위원장) 게다가 정부의 야만적인 단속 · 추방 정책 때문에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고, 죽고, 끌려간다.”

소부르 부위원장은 말한다. “우리는 이런 고통을 없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 우리는 권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는 걸 안다.”

토르나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표적이 될 것을 알면서도 지도부를 자청한 용기있는 투사들이다. 또 이들은 우리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를 위해 한국인들과 함께 어깨 결고 싸워 온 동지들이다.

민주노총 소속인 이주노조에 대한 공격은 바로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총력 투쟁 요구에는 이주노조 탄압 중단과 석방이 추가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이주노조 지도부를 석방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할 때까지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미친 소는 들여오면서 우리의 소중한 이웃을 쫓아내려는 이명박을 절대 두고 보지 말아야 한다.

[사국 강연회] 이명박 정부와 신자유주의의 위기

일시 2008년 5월 10일(토) 오후 3시

장소 명동 향린교회 3층 본당 (지하철 을지로 3가 역 12번 출구)

연사 우석균 (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송재혁 (교사, 전교조 서울지부 공립중등관악동작 지회장)

참가비 2천 원

문의 02-2271-2395, atgmail@nate.com, www.alltogether.or.kr

순서 1. 영상 상영(15분) : 강연 전에 <이명박 OUT> 영상을 상영합니다.

2. 강연

3. 청중토론 : 연사들의 강연 후 청중토론이 진행됩니다.

이 시간에는 누구든 3분 동안 발언할 수 있습니다.

주최 다함께

